

해양부 선진적인 해운제도 금년 도입

국적선사 종합 물류 기업화 적극 지원키로

장승우 장관 대통령에게 2004년도 업무보고

해양수산부는 선박금융, 조세 등의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해운지원제도를 금년내에 도입하고, 국적선사의 해외터미널 확보 지원과 다양한 해운시황 정보 제공 등 우리 선사가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성장(종합물류업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은 2월 13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동북아 물류중심 본격 추진 산업 경쟁력 강화위한 생산기반 조성 △살기좋은 어촌건설 및 유통구조 개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조성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산업화 등을 올해 추진할 5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2005년에 톤세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세제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출

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이 국적선사의 해외터미널 확보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필수 원자재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국내 대량화주와 장기 해상운송계약 체결을 유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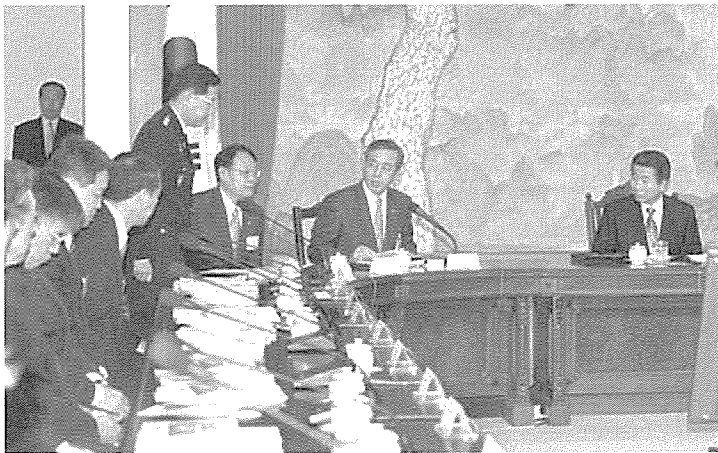
항만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등 항만경쟁력을 홍콩, 싱가포르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부산 신항과 광양항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돼 부산신항 북측부두 3선석이 2006년까지 개발되고, 배후부지 22만평에 대한 개발도 당초계획보다 2년 앞당겨져 2006년 완료된다.

해양수산부는 또 올해 상반기중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배후단지를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간 임대할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와 공동으로 국가물류 개선 T/F를 구성,

해상과 육상을 포함한 종합 물류업을 육성하고 연계 수송망을 구축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여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유실이 심한 해운대 등 해수욕장 백사장 보존을 위한 비디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연안정비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조



성을 위해 수질등급과 기준을 제정하고 안전·편의시설 설치 관리기준도 제정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월부터 VTS 영상재연시스템 가동(사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은)은 '선박교통관제(VTS)'의 영상재연시스템을 도입하여 2월 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해양사고 원인규명 등 필요시 국내 10개 주요항만에서 운용중인 항만교통정보시스템(PTMS)의 선박교통관제 영상을 컴퓨터 모니터상에 재연하여 선박의 운항상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항만부근에서 발생한 각종 해양사고의 실제상황을 사무실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심판과정에서 선박교통관제 영상자료를 곧바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과학적인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동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노르웨이 Norcontrol IT AS사에서 개발된 것으로 부산 소

재 IT 기업인 (주)장산아이티(대표 김홍곤)가 해양안전업무에 활용토록 해양수산부에 기증한 것이다.

제2 선박운용사 KSF선박금융 등록

자본금 70억원, 우리은행·장금상선 참여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박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제2의 선박운용회사가 탄생했다. KSF선박금융 주식회사(Korea Ship Finance Co. Ltd.)측은 2월 10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선박투자회사 법에 따른 선박운용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설립배경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밝혔다.

KSF선박금융(주)은 해양수산부 등록신청 하루 전인 2월 9일 법원에 주식회사로서 법인 등록을 마쳤다.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자본금 70억원이고 대표이사는 오학균씨, 감사는 박진철씨로 되어 있으며, 등기 이사에는 허 민씨, 박영락씨, 신주선씨 등 3인이 등재되어 있다.

KSF선박금융측에 따르면 자본금(70억원) 납입에 참여한 회사는 해운중개업체인 케이원해운, 우리은행, 장금상선(이상 대주주 3사 지분 75%) 등이며 기타 소액주주들이 자본금 70억원의 25%를 출자했다. 이중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은행이 직접 출자를 했다는 점으로 대외 신용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오학균 대표이사 사장은 대한해운공사, 대한선주, 한진해운, 거양해운 등을 거친 해운인으로 지난 2000년 2월 '한국해운의 국제경쟁력과 선박금융제도'라는 논문이 통과되어 해양대학교로부터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오 사장은 2000년말 거양해운(상무)에서 퇴임한 이후 코리아손해사정 임원, 해상교통정책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으며 해양대학교 겸임 교수를 맡



기도 했었다.

임원진 3명은 해운 및 금융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 임원인 허민씨는 대주주인 케이원해운의 대표이사이며, 박영락 이사는 국적선사 해외주재원을 지낸 해운영업의 베테랑으로서 향후 영업분야를 책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주선 이사는 금융계 출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 분야 업무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SF선박금융(주)는 강남구 삼성동(포항제철 본사 건물 근처 LG 트윈타워텔)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했으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운용회사로서 정식적으로 등록을 받게 되면 주변의 건물로 이전하여 본격적인 선박펀드 운용회사로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영업대상으로 삼는 선박은 선종을 불문하며 신조선이나 중고선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KSF선박금융은 제1호 회사인 한국선박운용(주)와 협조하여 새로운 선박금융제도 개척과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두회사간의 영업적인 공조체제에도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선박 신조영업이 가능하며 현재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이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적선사들이 계약을 받지 않고 이 선박운용회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회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근 이사 2명과 부장 2명, 차장 1명, 여직원 1명 등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추가로 3명 정도를 증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SF선박금융(주)는 2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선박투자회사 제도는 해운, 금융, 조선업계의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이 결합하

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서 KSF선박금융(주)은 선박투자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SF선박금융은 이어 “KSF는 해운업계와 금융업계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조기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삼일회계 법인과, 그리고 금융조달을 위해 우리은행과 각각 전략적 제휴를 통해 투자상품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제하고 “아직 선박투자회사 제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므로 우선 안정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선박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고 그 이후 유럽과 같은 고수익 상품도 개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만건설 PortCALS 구축·운영

온라인상 항만건설 관련정보 교환·공유 가능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사업의 e-Business 기반구축을 위한 ‘항만건설통합정보지원체계 (Port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일부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PortCALS’는 항만건설의 Life-cycle(계획, 설계, 시공·감리, 유지관리)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도면정보가 온라인(인터넷)상에서 교환·저장(DB화)되어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 등의 공사관련자가 상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2003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항만통합정보시스템(PortCIS, Port Construction Intergrated Information system)’의 시범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부터 현

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항만건설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PortCIS)' 기능은 ▲항별 기본계획, 공사 및 용역의 계약, 참여기술자, 기성정보를 관리 및 검색하는 사업관리기능 ▲도급자가 이동 또는 우편을 통해서 제출하던 착공보고, 월별 공정보고, 기성부분검사원, 준공검사원 등의 각종 보고자료를 온라인상으로 전송하는 문서작성·관리기능 ▲용역과 공사의 집행현황 등을 조건에 따라 파악할 수 있는 검색·통계기능 ▲항만건설사업의 용역과 공사 성과품 설계도서를 착공·변경·준공시 등록하여 검색할 수 있는 도서검색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어 항만건설CALS 기반구축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항만건설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2월 13일 시스템 시연회 및 사용자 교육을 거쳐 시범시스템을 현장실무에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점검, 문제점 파악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개선하면서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확대 개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 운영으로 올해부터 착공보고, 준공보고, 월별공정보고 등 17종의 보고서식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각종 자료가 전산화된다.

앞으로 해양부는 항만건설CALS기본계획에 따라 금년에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PortCIS)'을 확대 개발하여 1단계 2005년까지 항만건설 전과정에서의 정보처리 및 도면·문서 교환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 2007년까지는 1단계 시스템상에서 축적되는 DB정보를 분석 및 가공, 통계 처리하고 시설정보시스템 등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지식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인편이나 우편을 통

해 교환되던 모든 건설관련 정보가 전산화되어 온라인상에서 교환·공유하게 됨으로써 도면 등 귀중한 자료의 손실이 방지되고 자료의 보관·검색이 용이해진다. 또 정보의 공유 및 재활용을 통한 지식 창출과 자료의 전송·보관 등의 경비 절감과 재활용에 의한 생산성이 증가되고 나아가서는 정보공개에 의한 건설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첫 해상 수색·구조훈련

해상사고 발생시 공동대처 능력 확인

한국과 러시아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긴급 해상사고가 발생할 때 공동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했다.

해군2함대는 2월 15일 오전 서해상에서 러일전쟁 100주년 행사를 위해 방한한 러시아 태평양함대훈련단대와 양국 해군 간 해상사고 발생시 공동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한·러 수색 및 구조훈련을 펼쳤다.

양국 해군 간 최초인 이번 훈련에서 우리 해군은 광개토대왕함(DDH)·부천함(PCC) 등 4척의 수상함정과 해상초계기·대잠함기 등이 참가해 러시아 측 바락·코리츠·트리부츠 등 세 척의 함정과 함께 전반적인 해상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양국 해군은 수색·구조훈련 관련 통신교환훈련을 시작으로 전술기동훈련, 조난신호 청취·전파훈련, 조난선박 탐색·인명구조훈련, 화재진압·조난선박 예인 등의 수색·구조훈련을 실제상황처럼 펼쳤다.

이날 훈련을 지휘한 해군2전투전단장은 '치밀한 사전 준비와 완벽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이번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양국 간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교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인천항 석탄부두로 입항한 러시아 태평양함대훈련단대는 이날 훈련을 마지막으로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모항인 블라디보스토크로 귀항했다

한국해운물류학회

제2회 해운물류 e-Biz 시상식 거행

한국해운물류학회(회장 오세영 동덕여대 교수)는 2월 13일 서울 COEX 4층 오펜룸에서 제2회 해운물류 e-Biz 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진해운이 지난해에 이어 해운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e-Biz 대상을 수상했으며, 항만 및 해운지원사업 부문은 세방기업이, 공공 부문은 부산해양수산청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식에는 한진해운의 최원표 사장과 세방기업의 이상웅 사장, 이재균 부산청장 등이 직접 참석해 대상을 수상했다.

해운물류 e-Biz 대상은 우리 해운물류업계가 다가오는 e-비즈니스 시대를 선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선정작업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공모를 받지 않고, 웹사이트 평가를 통해 각 부문 5개 업체를 선정한 뒤 각 부문 5개 업체를 대상으로 Cyber Poll과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수상업체를 선정한다.

이번 e-Biz 대상은 해운부문에서 총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됐으며 최종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SK해운, 흥아해운 등이 각축을 벌여 한진해운이 컨테츠부문에서 A+, 고객만족도 A, 시스템 A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

항만 및 해운지원산업분야는 총 396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됐으며 최종 대한통운과 세방기업, (주)한진, KCTC가 각축을 벌인 결과 세방기업이 컨테츠 부문에서 A, 고객만족도 A, 시스템 A 등의 평점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공부문은 30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부산해양청과 마산해양청, 제주해양청, 쉬퍼스케이프, 해양소년단,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최종 결선에 올랐으나 부산청이 컨테츠 B+, 고객만족도 B+, 시스템 B+로 대상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2회부터 신설된 복합운송부문은 총 129개 업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으나 대상을 받을만한 만한 수준의 해당업체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 대상수상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한국해운물류학회는 신태범 KCTC 회장에게 제13회 해사문화상을 시상했다.

재경부 컨테이너세 연차적 인하

오는 2006년에 완전 폐지키로

재정경제부가 부산시 컨테이너세를 연차적으로 인하한 뒤 오는 2006년말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부산시가 '컨세 인하 손실분 국비지원' 조건부 수용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재경부는 2006년 중국 상하이 신항만 개장에 대비해 부산항의 국제물류비 절감 등 차원에서 매년 컨세를 인하한 뒤 2006년말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최근 부산시에 검토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시가 20일 밝혔다. 인하 내용은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인 현행 컨세를 2004년 1만5,000원, 2005년 1만원, 2006년 5,000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산항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부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세 인하는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가중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재정부의 방안대로 컨세를 인하할 경우 3년간 총 손실액이 1,324억원(2004년 110억원, 2005년 468억원, 2006년 74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최근 항만배후도로 국비 보조액이 2003년 100억원(전체 요구액의 13.3%)에 이어 2004년에도 100억원(7.4%)에 그쳐 컨세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부산항 항만배후도로(14개 노선·1988~2008년) 건설사업은 올해 이후에도 5821억원의 국비를 더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컨세 인하때 손실분의 국비 지원을 전제로 단계적 인하 방안에 동의한다는 방침을 재정부에 제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대 용역결과 배후도로 건설 지연시 연간 1533억원의 물류비용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도로파손 복구비 등에 따른 시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돼 국비지원 없는 컨세 인하나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컨세는 컨 수송을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목적세로 당초 징수기간은 1992~2001년이었으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지난해까지 총 징수액은 7,430억원이었다.

부산항 ODCY 2011년까지 연장 추진

부산 신항만 장치장으로 수송 한계

부산항 임항지역 ODCY(부두밖 컨테이너 장치

장)의 연장 운영이 추진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설영특허기간 완료로 오는 2006년말 폐지되는 ODCY를 부산신항만이 완전 개장되는 오는 2011년까지 존치키로 하고 관세청과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항 임항지역 ODCY는 전체 18개로 지난 99년 부산의 교통난 해소와 컨테이너 화물의 양산HCD(내륙컨테이너기지) 이용 유도를 위해 ODCY 3단계 폐쇄 방침에 의해 오는 2006년말까지만 특허기간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폐쇄키로 했었다.

부산해양청은 그러나 "부산항은 갈수록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재 ODCY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오는 2006년 개장되는 부산신항만 3개 선석과 장치장만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오는 2011년 부산신항만이 완전 개장되는 시기까지 ODCY가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DCY 운영업체인 대한통운 이국동 부산지사장은 "부산신항만이 오는 2006년 3개 선석이 개장되더라도 동남아와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오는 환적화물은 계속 부산항 일반부두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부두내 장치장이 없는 일반부두는 ODCY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011년 부산신항만이 개장되고 부산항 전체 부두의 기능 재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ODCY가 연장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해양청은 최근 열린 부산항만공사(BPA)와의 업무협의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항만공사와 공동보조를 맞춰 ODCY 존치 연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부산항에 업무혁신 바람

부산해양청 업무혁신팀 신설

공공서에서도 ‘커피브레이크(Coffee Break)’ 시간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균)에서는 2월16일 청사 본관에 ‘해양수산인의 방’을 설치하고 도선사, 선원, 하역업체종사자, 어업인 등 해양수산 관계자들을 초청, 직원들과 차 한잔을 나누면서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한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산해양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현재 주 1회(수요일 10:30 ~ 11:00)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호응이 좋을 경우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부산해양청은 2월 6일 테스크포스(Task Force) 조직인 “업무혁신팀”을 신설하여 “선원 진정·고소사건 당일조사제”, “민원상담업무 데이터베이스화” 등 중점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해양부직원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인 OKIS에 가칭 “Innovation Busan호”라는 업무혁신 토론태당을 개설하는 등 부산항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

통관 소요시간 5일 이내로 크게 단축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 로드맵 발표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2월 13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

에서 『수출입통관 물류시스템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이상 증가하던 환적화물이 금년도에는 12.9%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특히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전년 동기대비 3.4% 감소세로 반전되었으며,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이 세계 3위에서 5위로 전락하여 위기감이 고조된 시점에서 발표되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금년말까지 입항에서 반출까지의 화물처리 시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하는 내용과 함께, 국내 공항만의 HUB화 전략 및 국가 물류정보망 구축 지원 등 3개분야 36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통관소요시간 단축(현행 9.6일 ⇒ 5일 이내)

현재 우리나라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수입신고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이 9.6일이 소요되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항만시설의 화물 적체가 가중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입항·하역단계에서는 적하목록 조기 입수, 하선기간 단축 및 낙후된 하역시스템 개선, 주요 공항만의 24시간 통관지원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반출단계에서는 통관이 완료된 물품의 조기반출 제도 시행 등 화물처리 단계별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입화물 처리시간을 현재의 절반 이상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운영

관세청은 이밖에도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통합 운영, 특송화물 면세범위 확대, 환적절차 간소화 및 국내 수송체계 개선을 통해 공항만 Hub화 추진을 지원하고, 한번의 세관신고만으로

수출입물류체계 혁신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15개)

과제명	현 형	개 선	시행
1 적하목록 조기입수	입항 후 제출관행(14%)	입항전 제출 완료	3/4분기
2 출항/입항전 신고 확대	이용실적 미비(4.3%)	제도의 활성화	3/4분기
3 부두직통관 화물 조기반출	부두 반입후 10일내 반출	부두 반입후 7일내 반출	1/4분기
4 하선기간 단축	하선신고후 5일내	하선신고후 3일내	1/4분기
5 보세구역 정착기간 단축	보관가능기간 : 1년	공항만 터미널 : 3개월 기타 내륙지 : 1년	1/4분기
6 하선신고자동수리	자동수리비율 : 60%	자동수리비율 : 90%	1/4분기
7 외항선에 의한 화물 국내운송	불 허	허 용	1/4분기
8 수입화물의 운송	하나의 운송수단(예:차량)으로 운송	복수의 운송수단 (예:차량&철도) 허용	1/4분기
9 여러건의 보세운송을 한건으로 일괄신고	출발지 및 목적지가 단일한 경우만 허용	모든 경우 허용	3/4분기
10 신속한 수입신고	신고의무기간 없음	30일내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4/4분기
11 PDA 이용 화물검사	물품검사 후 세관에 돌아와서 통관처리	물품검사현장에서 통관 종료	3/4분기
12 통관원료물품 조기반출	반출의무 없음	공항만 지역은 통관원료 후 15일내 반출의무 부여	4/4분기 '05년
13 보세화물 자율통제 시스템 구축	보세화물을 세관에서 직접 관리	민간업자가 세관을 대리하여 보세화물을 자율관리	
14 법규준수도 평가		보세화물의 자율관리에 따른 법규준수도 측정	3/4분기
15 감시체계 첨단화	초소를 설치하여 부두출입 통제	기동순찰체제로 개편	1/4분기

통관이 가능한 Single Window 체제 구축, 유관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표준화, 전자문서 입력 항목의 최소화 등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추진하면서 우리청 통관망을 중심으로 국가 종합물류망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칠레 FTA 비준으로 교역확대 예상 중·장기적으로 수출증가액 2억달러 이상 3~4년내 약 7천만달러 증가전망

정부에서 지난해 2월 체결한 한·칠레 FTA에 대해 국회에서 네차례에 걸쳐 비준 통과를 시도한 끝에 2월 16일 드디어 비준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한·칠레 FTA가 발효될 경우, 자동차·무선전화기·가전제품 등 7대 주요 공산품의 對칠레시장 수출 증가액이 단기적으로는 약 7천만달러, 중·장기적으로는 약 2억2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산자부는 “한·칠레 FTA 발효로 우리나라 주요 공산품의 對칠레시장 점유율이 단기적으로는 약 5~10%, 중·장기적으로는 약 10~20%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한·칠레 FTA비준을 계기로 우선적으로 칠레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이를 교두보로 삼아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통상 사절단 파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